

오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5. 4. 14(화), 10:00~17:00

장소 대전 유성호텔

주최 한국오리협회



1. 주제발표 (10:00~12:00)

* 주제 : 방역측면에서의 오리산업 구조개선
△국내 오리산업 현황, △AI 발생원인 분석,
△사육시스템 개선(유통포함),
△방역시스템 개선, △사육시설 개선

* 발표 : 반석LTC(가금질병연구소) 손영호 대표

2. 오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13:00~17:00)

* 좌장 : 서울대 김재홍 교수
* 패널 :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관리과장,
국립축산과학원 최희철 연구관,
전북대학교 장형관 교수, 반석LTC
손영호 대표, 한국오리협회 마광하
사육분과위원장, 농협중앙회 이제영
단장

한국오리협회는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AI와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오리 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오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오리 산업의 근간인 사육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관·학이 함께 모여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주제발표시간에는 반석LTC 손영

호 대표가 국내 오리산업 현황과 AI 발생 원인을 짚어본 후 오리사육시스템과 방역시스템, 사육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70여 명의 오리사육회원과 패널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다음은 2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정리 : 한국오리협회 편집부

[패널 인사]



최희철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전 가금과장) :

축산과학원 가금과장을 하면서 오리분야 연구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작년에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가금과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축산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표준설계도 제작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가금분과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도 농림부에서 각 축종별 축사시설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앞으로 오리사 신축이나 개축시 어떤 형태로 하겠냐는 질문에 무창오리사로 하겠다는 응답이 42%가 나왔다. 2013년도에 축산과학원에서도 같은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창오리사로 하겠다는 응답이 1.9%, 원치커튼개방오리사로 하겠다는 응답이 61%였다. 불과 1년 사이에 오리농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축사시설과 방역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특히 오리는 단열이 부족하다보니 결로현상과 수분배

출 문제로 깔짚이 다량 필요하고, 깔짚 차량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그동안 질병발생은 오리 생산성 저하를 낳고, 이는 시설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로 인해 다시 질병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우선 시설투자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켜 다시 시설에 재투자하고 질병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장형관
(전북대학교 교수) :

오리산업 역사상 이렇게 민·관·학이 모두 모여 토론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다. 조류질병관련 연구를 해왔고 주로 양계분야를 연구해오다가 5~6년 전부터 AI를 제외한 오리질병을 연구해왔다. 오늘 토론회 자리가 오리질병을 포함해서 오리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

AI예방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공문이 많이 내려오는데 농가현실과 괴리가 큰 지침이 많다. AI가 장기화되다보니 이동제한을 감수했을 때 농가소득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을 보강해줘야 한다. 또 소득안정자금에 대한 지침이 현재 애매하다. 이 부분을 농가현실을 좀 더 고려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 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축사 전설설치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차라

리 축사입구 안개분무가 더 적합하다. 현재 지침에 의해 전실을 설치해놓긴 했지만 실제 사용은 안 되고 있다. 농장에서 정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토론 자리가 앞으로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교수):

정부의 정책부서, 기술부서, 그리고 지자체, 농가 현장 간에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들어있는 것이 많다. 오리산업에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오늘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이제영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 양계분야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오리는 육계 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육계 계열화가 초기에 정착될 시기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다. 육계는 계열주체를 통해 산업을 이끌어 왔다. 오리도 95%이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AI의 경우 오리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육계 발생은 거의 없는데 왜 육계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는지 원인을 찾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02년 말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오리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어 소비홍보에 집중했었다. 그때부터 오리의 효능과 우수성이 홍보되면서 오리산업이 급격히 발전했다.

그런데 2011년을 기점으로 오리사육규모가 1억 만수까지 올라갔다가 주춤했다. 삼겹살 위주의 외식소비가 오리로 이동해가면서 산업이 일정 단계까지 올랐으나 훈제오리 이후 특별한 오리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농축산부에서 올해 축사표준설계도 제작을 하게 된다. 육계, 산란계, 양돈은 물론 오리분야까지 올해 추진되며 내가 총괄을 맡고 있다. 오늘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를 수렴해 표준설계도 제작에 반영하겠다.

[자유 토론]



김재홍 교수
(서울대학교):

그동안 오리산업이 급성장해왔는데 그만큼 사육 시설이 따라오지 못했다. 중국 등의 동남아에서 오리를 많이 키웠는데 2003년 AI가 발생해 중국 등 동남아의 오리수입을 금지시켰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오리를 자급자족하게 되었고 그 덕에 오리산업이 급성장했다. 토론자들 자유롭게 질문해 달라.



홍경표 회원
(충북 음성):

최희철 연구원에게 질문한다. 한국은 원종오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체리밸리사, 프랑스의 그리드사의 원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종오리 개발이 불가능한가?



최희철 연구관
(축산과학원) :

그동안 축산과학원에서 백색오리 종자를 개발해 왔으나 작년에 축산과학원에 AI가 발생하는 바람에 살처분했다. 백색오리 종자개발이 축산과학원의 미션 중 하나였고 앞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다. 토종오리 종자는 계통조성이 돼서 농가 보급을 시작했다. 백색오리는 개발하다가 중단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홍경표 회원 :

오리종류가 무수한데 AI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다. 그것을 축산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나?



최희철 연구관 :

오리뿐만 아니라 닭도 계통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가금티푸스 질병의 경우 백색산란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갈색 산란계는 발생률이 높다. 축산과학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연구소에서도 AI 저항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제로 질병을 이기는 종자가 따로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것이다.



홍경표 회원 :

박정훈 과장에게 질문한다. AI 발생

시 종오리 이동제한 기간이 4주인데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크다. 이동제한 기간을 완화시킬 수 없는가?



박정훈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작년에 종오리 농장 피해가 컸던 것 잘 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으나 AI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도 종오리 농장이기 때문에 이동제한 기간을 완화시키긴 힘들 것 같다. 그러나 검역본부와 다시 상의해 보겠다.

AI로 인해 불만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어 미리 말씀드리겠다. 작년 8월 14일 AI 개선대책 발표를 했고 이번에 추가대책을 만들고 있다. 큰 틀로 말하면 산업구조 개선, 검역본부 위치, 오리질병관리시스템, SOP 등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차차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요새 오리산업이 사육농가 뿐만 아니라 산업전체가 코너에 몰려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도 오리를 담당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오리산업이 빠른 시간에 급성장한 만큼 무너지기도 쉽다.

방역에도 한계가 있다. 방역만 잘 하면 AI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농가현장을 본 후로 방역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만큼 농가시설이 열악하다. 허가제, 시설개선, 농가와 계열사 및 유통 관리 등이 완비되어야 AI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AI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선을 통해 최소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동안은 AI가 터지면 살처분하고 보상해주는 사후대응 체제였다. 국내에 AI가 10년 동안 계속 터져왔는데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태국

은 오리산업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태국은 2003년에 우리나라와 함께 AI가 발생했으나 2006년까지 네 차례 발생 후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태국은 방역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바꿨다. 마인드를 바꾼 것이다. 허가제, 시설기준,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리도 태국처럼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통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계열사나 농가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한 후에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김재홍 교수 :

태국이 우리보다 AI가 먼저 발생했다. 그 당시 태국의 조직은 형편없었는데 빠르게 변화해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보다 조직이 선진화되었다. 우리는 10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AI가 발생해서 담당 공무원이 AI 전문가가 되고 나면 조직이동을 하게 되고, 추후 AI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홍경표 회원 :

손영호 대표에게 질문한다. 1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분변관련한 질문이다. 오리축사 동 이동시마다 장화를 갈아 신는 것 말이 안 된다. 오리축사를 운영하려면 최소 1,50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결코 축사 1~2개동 갖고 운영할 수 없는 규모다. 그런데 축사 동마다 장화를 비치하고 매번 갈아 신으라고 해서 장화를 비치해놓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오식행위다. 방역분무기도 동마다 설치했다. 차라리 한 번에 소독할 수 있는 축사 안개분

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발표 시 이 부분에 대해 지적만 할 뿐 대응책이 없었다.



손영호 대표
(반석LTC) :

왕겨살포, 전실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 말 하겠다.



배중울 회원
(한국오리협회 전북지회장) :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을 100%에서 80%로 삭감 후 AI가 더 확산되는 것 같다. AI 양성농가 입식기간이 너무 길다. 비닐도포 꼭 해야 하나.



박정훈 과장 :

살처분 농가보상을 100%에서 80%로 삭감한 이유는 농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금과 AI발생률을 연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 도려내는 게 최고였다. 작년부터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서 SOP를 개선했다.

양성농가 비닐도포 효율성 문제는 우리가 무허가 축사 분뇨처리관련해서 비닐을 깔면 허가로 보겠다고 해서 개선해준 것이다. 최소한의 개선사항이다. 분뇨처리시설을 마련한 경우만 허가해주고 싶었지만 열악한 농가현실을 감안해서 비닐만 깔아도 허가해 주기로 한 거다. 그런데 3년 유예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방역차원에서 좀 앞당겨서

시행해보자 한 거다. 비닐도포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고, 고칠 사유가 충분하다면 고쳐나가겠다.



배종울 회원 :

농가들 축사동과 동 사이에 길은 매일 소독한다. 그러나 축사내부는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없다. 그리고 각동에 전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왕겨차량도 다녀야 하고 퇴비를 퍼내야 하는 형편인데 그때마다 전실을 매번 뜯어낼 수도 없고, 전실 설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정훈 과장 :

전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 실효성 여부를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전실은 모든 위생과 방역의 기본이다. 전실에서 1차적 차단이 된다. 왕겨차량 장비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면, 전실로 비닐하우스 앞 전체를 다 막자는 게 아니라 사람 통로 부분만이라도 한 쪽 벽에 전실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실설치기준에 대한 홍보 팸플릿도 한 번 나왔고 전남 쪽에서 팸플릿을 갖고 설명한 적도 있다. 왕겨통로는 따로 만드는 법을 고려해 보자.



김재홍 교수 :

농식품부에서 오리산업 구조개선 관련하여 현재 정책적으로 결정되거나 추진 중인 부분이 있나?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면 토론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박정훈 과장 :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추진 중에 있다. 시설개선, 허가제, 오리산업개편이 큰 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후대응체제'가 아닌 '사전예방체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아직 AI 상재화는 아니다. 단 상시발생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체제다. 그동안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위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오리산업 전체에 피해가 크고 산업적으로도 부정적이었다. 이제 상시발생체제의 질병관리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의사가 질병을 관리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아직 가금전문수의사가 없다. 농가가 질병을 자가진단하고 처방 내린 후 수의사가 약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 구조를 개편해서 수의사가 상시 농가에 방문하고 컨설팅한 후 약품을 처방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다. 질병관리시스템을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오리 쪽은 신청자가 없다. 가축공제제도, 질병등급체제도 도입할 것이다. 가금전문수의사도 육성되어야 한다.

사실 1년 전에 비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방역 측면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계열사에서 지침을 어기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계열사와 농가 모두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고맙다. 거리제한도 검토중에 있다. 나는 휴지기를 찬성한다. 방역과에서는 휴지기를 찬성하고 있으나 경영과에서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휴지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조율중이다.

비닐하우스 축사관련 신규허가 금지도 검토중에 있다. 가설건축물 사용승인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으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농가가 시설투자를 하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재홍 교수 :

아직 농식품부 차원에서 시설개선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 박정훈 과장이 정책 개선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

김상제 회원 (충북 음성) :

내 농장 옆 농가에서 AI 양성이 나와 살처분했다. 그런데 농축산부에서 내 농장 오리도 AI에 걸릴 때까지 키우라고 한다고 해서 키웠다. 1주일 후 내 농장에서 양성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동안 피를 말리면서 오리를 계속 키웠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살처분하는 날 피를 빼가더니 양성으로 나왔다. 그전 분변처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 상태였다.



박정훈 과장 :

농가에서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정부에서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지, 알려주면 농가에서 배울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검사를 해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옆 농장에서 살처분해서 내 농장으로 AI가 옮았다고 생각하는가? 계열사 농

가 차량은 100% 소독 완비한 상태였는가? 정읍의 한 농장을 가보니 분변도 그대로 있고 소독했다고 하는데도 왕겨살포기에 분변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그 위에다가 소독을 하더라. 시각의 차이인 것 같다. 농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 디테일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김상제 회원 :

양성농가 입장에서 피해가 너무 크다. 반경 500m 살처분한다고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내 농장은 옆 농장과 불과 100m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AI에 걸릴 때까지 오리를 키우라고 농림부 지시라며 전달받았다.

농림부에서 계열사로 전달이 왔다고 했다. AI에 걸릴 때까지 키우라고. 나는 그로 인해 피해가 너무 크다. 목숨 걸고 키우는 오리를 옆집에서 살처분하고 있는데도 농림부 지시라 어쩔 수 없다며 계속 키우라고 했다. 농가를 매도하지 말라.



김재홍 교수 :

H5N8이 감염율이 낮고 속도가 느려 과거 H5N1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오리에서 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농가현장과 질병을 진단하는 쪽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유관상 문제가 없는데도 혈청검사서 양성으로 나온 곳이 많다. 죽어나가는 개체를 진단해보면 양성 개체가 있다. 폐사개체 신고를 안했기 때문이다.



장형관 교수 (전북대학교) :

회원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겠다. 현재 오리전문수의사는 계열에서 고용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농가에서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오리수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리를 포함한 가금전문수의사 양성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오리전문수의사가 생길 경우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왕진 및 컨설팅요청을 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왕재 회원
(충북 음성) :

오리사육환경은 농장주에 따라 많이 다르다. 오리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한다. 동물은 모체이행항체를 갖고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 오리의 면역체계를 종오리부터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는 약품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손영호 대표 :

모체항체는 기타 질병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AI에는 해당이 안 된다. 환경적 요인이 면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축사 환기, 습도, 깔집 등에 의해 면역력이 달라진다. 일례로 전남의 한 농가에서 엄청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오늘 양성판정을 받았다. 면역력 높은 오리에게 AI가 오면 늦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환경컨트롤을 잘 해서 질병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백신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AI는 면역물질로 방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마광하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

장교수 질문에 답하겠다. 질병컨설팅 사업을 올해 시작했는데 오리 농가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 수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리농가에 간염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수의사를 통해 처방받고 개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농가에서는 수의사 말을 잘 듣고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의사도 질병을 막지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준수사항만 지시한다. 전문 수의사 육성에는 찬성하지만 현재까지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사업 신청을 안 하는 것이다. 전북대에서도 오리간염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 성과가 잘 나와서 농가와 함께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제 와서 오리전문학교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라리 AI질병연구센터를 정부차원에서 건립해달라고 그동안 건의를 많이 했다.



박정훈 과장 :

질병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은 오리농가도 느끼고 있으나 현재 수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을 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나?



김재홍 교수 :

대한수의사회에서 축종별 전문수의사 제도를 추진중이다. 컨설팅을 한다면 전문수의사 교육이

우선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



이우진 회원
(주원산오리 대표) :

오리컨설팅은 산업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 경험과 습관에 의해 오리를 사육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AI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부담을 농가에 전가시키면 농가는 안하게 된다. 비용발생 부분을 정부와 농가와 계열이 어떻게 분담해서 나눌 것인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또 전문 수의사도 각 지역별로 양성되어야 한다.

SOP 관련사항에 말하겠다. 해당지역내 AI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도축장을 지정해준다. 보호지역 구역에 도축장이 있으면 도축장 폐쇄조치까지 내린다. 이는 문제가 있다. 지역간 이동제한으로 교차오염 우려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다. 안성에서 제천까지 10분 거리임에도 도간 지정도축장 때문에 안성지역 오리는 80km 떨어진 양평 도축장까지 가야한다. 지정 도축장 운영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방역대별 위치나 거리를 고려해서 지정도축장을 도단위로 하지 말고 경계 지역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에서 AI가 걸려도 충북에서 도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차오염이 역학으로 보면 사료운반, 깔짚, 친인척간 왕래 등 여러 이유가 있다. 방역위원들은 도축장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도축장을 통제하면 된다고 말한다. 3km가 아닌 위험지역 500m 쪽으로 SOP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앞으로 방역시설 기준서를 마련해서 허가제 교육실시할 때 교육장에서 농가에 나눠주는 등 권한이 있는 정부가 방역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최명호 회원
(충북 진천) :

올인올아웃 사육방식에 대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육계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육계는 평당 사육수가 오리보다 많고 깔짚을 한번 깔면 출하 시까지 깔짚을 깔지 않아 올인올아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리는 입식부터 출하까지 최소 10번 이상 깔짚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올인올아웃 방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 방식을 아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동절기에만 시행한다든가,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농가의 여러 의견을 꼭 반영해서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운영하는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는데 그들도 시설 개선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형구 (자연일가 사육담당) :

현재 살처분 비용을 농가와 계열사에서 분담하고 있다. 지자체 권한이긴 하지만 각 시군구마다 규정이 달라 비용분담률이 다르다. 정부에서 통합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윤득수 회원
(충북 음성) :

아무리 역학조사를 해도 아직도 명확한 AI 원인을 몰라 답답하다. 또 경계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살처분 농가는 생계자금을 주는데 반경에 들어와 오리입추가 지연된 농가는 안정자금을 주

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산출근거를 몰라 답답하다.



홍경표 회원 :

가축분뇨처리에 대해 이중 잣대를 재고 있다. 오리는 깔짚을 10cm 이상 깔아줘야 잘 크다. 그런데 AI로 깔짚을 전부 치우라고 한다. 분뇨검사를 수십 번 해가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생균제를 많이 뿌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한다. 깔짚에는 오리에게 이로운 미생물균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방역을 하라고 하니 그 깔짚에 소독을 한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과정에서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사람에게 이로운 세포까지 죽인다고 한다. 방역하느라 오리에게 이로운 균까지 다 죽이는 꼴이다. 아무 이상이 없는 깔짚을 굳이 치우고 새로 깔면서 비용소모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희철 연구관 :

오리를 사육함에 있어 사육환경 불량은 단열불량이나 환기불량일 것이다. 닭은 20년에 걸쳐 환기 체계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오리에 대한 환기 체계는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수분이 누적되어 깔짚이 질어지고 이로 인해 환경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오리사 환기체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설측면에서는 보온덮개 비닐하우스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온덮개 오리사에서

도 오리를 잘 키우는 분도 있다. 그러나 환기체계나 시설측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개선은 꼭 필요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앞으로 면세유가 중단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절감이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절감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형관 교수 :

회원들 질문에 총체적으로 답하자면, 농장의 방역이 사실 너무 미약하다. 오리농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AI가 어디로 왔는지 추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복잡적으로 얽혀 있다. 이 무방비 상태를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마광하 부회장 :

수의사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것을 보면, 오리 출하시 출하타임이 오염시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전남지역에서는 가두리망의 필요성을 느껴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

전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토론해야 한다. 사육장과 전실과의 관계에서 왕겨부분은 차량 없이도 왕겨집진실을 이용하면 뿌릴 수는 있으나 역시 비용문제다.

앞에서 오리농가가 무창개사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실과 먼 이상적인 내용이다. 아마 무창개사를 안 써본 사람들이 무창으로 하면 질병을 완벽히 차단할 것 같아 응답했을 것이다. 내가 몇 개동을 무창으로 써보니 무창개사에서 오히려 질병발생이 더 많았고 사육성적도 안 좋고 사료

효율성도 안 좋았다.

농장에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들어오게 하자고 건의했다. 예전에는 보온에만 신경 쓰고 바닥질병에는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사실이다. 무창개사는 바닥에 수분이 많아지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바닥 발효가 잘되 왕겨도 잘 들어가고 환경이 더 좋다. 오리사는 깔짚이 가장 중요한데 수의사와 정부는 이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물복지만 외치지 말고 동물이 면역력 키워 AI 이겨내는 방법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살처분하기에 급급했다. 살처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멸하니깐 그렇게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고상식축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바닥을 물로 세척하면 그걸 어디에 버려야 하는가? 다만 적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많이 기를 수 있고 질병을 잡기도 수월하긴 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다.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으로 가야 한다. 바닥 깔짚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바닥 깔짚의 차이다. 사료기술력도 좋아졌다. 20년 전에는 F1, 2, 3 오리까지 사육했었는데 그때는 질병이 없었다. 지금은 원종오리만 키우고 있는데 순수혈통으로 갈수록 증체가 잘 되는 장점은 있지만 질병에 약한 경향이 있다.

왕겨 깔짚 포대를 통해 농장간에 전파되는 경향이 많다. 왕겨집진실 혹은 왕겨창고가 보급되어야 한다.



이제영 회장
(농협중앙회) :

육계의 경우도 20년 전부터 올인올아웃 방식이 나오면서 정착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초기단계인데 계열중심으로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우수사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철새가 있는 이상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다. 축사표준설계도를 보면 오리에는 적합한 환기시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무창오리사 농장을 잘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좋은 사례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또 오리사의 시범시설을 설치운영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깔짚 관련해서는 고상식오리사를 제안한다. 비용문제가 있고 실패사례도 있지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방역시설 기준 교육관련은 농협 컨설팅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시설 기준 마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



배종울 회원 :

우리 옆 농장에서 3년 정도 고상식 오리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했다. 물청소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 가스 발생량이 많고 증체량이 떨어진다. 오리는 깨끗하나 증량이 덜 나가고 질병에 너무 약하다. 심지어 오리 운반 차량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 고상식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아직까지 정확한 오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고, 오리전문 교육시스템도 갖춰

져야 한다.



손영호 대표 :

올인올아웃을 오리에는 적용시키기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 바뀌셨으면 한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시기를 바란다.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오리농가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리농가의 현대화사업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김재홍 교수 :

오리농가는 AI 발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예산이 이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박정훈 과장 :

도간 지정도축장 관련 거리문제는 도간에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정도축장이 열악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농식품부에 신고해 달라. 조치하겠다. 도축장 폐쇄조치는 완화할 생각 없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현장 전문가가 가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해제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축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올인올아웃은 시행해야 한다. AI 위험관리 지구가 설정되면 그 지구는 올인올아웃이 의무화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철새가 많은 지역에는 아예 농장을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오리산업질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다.

깔짚에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방역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상의해서 오리쪽 연구도 계속 할 것이다. R&D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후관리를 연구했다면 앞으로는 사전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할 것이다.

축사현대화시설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무허가 비합법 시설에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지금은 농장 규모와 상관없이 방역 시설 면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농가에서도 기준에 맞게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고상식 축사의 경우 효과를 보는 곳도 분명 있다. 긍정적 부분도 많다고 하니 검토해보기를 권한다. 오리사 표준모델은 농진청과 농협이 참여해서 작업하고 있다. 추후 세팅이 되면 정책자금은 그것이 기준이 될 것 같고 축사현대화사업에 반영이 될 것이다.

전문화된 농가교육 추진도 좋고, 앞으로 민간 컨설팅사도 육성하고자 한다.



이우진 대표 :

계열사 입장에서 올인올아웃을 하게 되면 8~9회전이 5~6회전으로 회전수가 떨어지게 되고, 80개 농가를 갖고 있었다면 100개 농가를 갖고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적이 좋지 않아 퇴출시켰

집중.탐.구.

던 농장한테 반대로 오리 좀 키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이는 사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낙후되는 꼴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콤파스로 반경 10km를 그려 방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산과 강 등 지역 동선을 무시한 제도인데, 반경 10km에 들더라도 동선이 구분되어 있다면 방역권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한다.



박정훈 과장 :

현재 SOP상 지역 동선을 고려해서 방역대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역 역학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SOP 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지자체가 일일이 탄력적용 하기에는 역량이 안 된다.

살처분 매물 비용 소관은 지자체다.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르고, 판단기준도 지자체가 만들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고 지자체 소관이라 농림부에서 지침을 주기는 곤란하다.

강형구 (자연일가 사육담당) :

AI는 법정 전염병인데 살처분 비용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지자체 소관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많다.



마광하 부회장 :

올인올아웃은 질병예방 차원에서 농가도 협조할 부분은 해야 한다.



김재홍 교수 :

4시간 가까이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시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중간에 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다. 그만큼 산업이 위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AI 같은 질병 때문에 축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다. 산업 내부에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서 빨리 오리산업 구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병은 회장
(한국오리협회) :

AI는 항상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장 뿐 아니라 전 산업 종사자가 합심해서 대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오늘 토론 내용은 정리해서 하나 하나 짚어 나가겠다. 협회에서 회원과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겠다. 다른 회원들도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지회장이나 분과위원장을 통해 문서로 제출해주면 검토하겠다.